

#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탈탄소 사회로의 체제 전환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인류가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8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티핑포인트인 1.5도에 도달할 시점을 2021~40년으로 전망하였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보고서에서 2030~52년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더 줄었음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은 우리 사회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주체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그린뉴딜은 2008년 영국과 미국에서 제안된 개념인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한 데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020.7.)에서 디지털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을 주요 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들은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으로 대표되는 “ESG 경영”을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들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수반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한 개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름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그린뉴딜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 대

통령이 추진하였던 정책인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징으로서의 “그린”을 합한 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같지만 그린뉴딜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전략”<sup>1)</sup>에서부터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현 경제시스템의 실패에서 유래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사회·경제·정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략”<sup>2)</sup>에 이르기까지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두 편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속도의 중요성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산불과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인류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 영국 사례를 소개한 앤 페티포는 여전히 정부가 “경제성장” 담론에 기반한 자본의 이윤 추구를 전제로 기후위기 대응 “유예”와 “자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운석 충돌로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앞에서도 이렇게 안일하고 나태한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경고한다.

둘째, 기후 붕괴와 경제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시스템 개편의 중요성이다. 그린뉴딜이 금융과 경제, 생태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면,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화석연료 생산-소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위협의 불평등한 분배, 일터에서 노동의 교섭력 약화 등은 현 경제시스템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이해관계자의 기업 운영에의 참여와 교섭력 증대와 같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 이 과정에서 초국적 공

1)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Mean.do>

2) 김현우(2020),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정책 과제」, 『노동N이슈』, 제 2020-07호, 한국노동중앙연구원.

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소개하는 이 두 편의 글이 그린뉴딜을 둘러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논쟁을 모두 압축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KLI**